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 사례 01 2022강원조정1/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건부 추후보도)

지역어항 요트계류장 불법 운영 의혹 보도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장래 경찰 수사 종결 후 신청인이 언론사에 수사결과를 통지하면 그 결과를 후속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요트 마리나 사업을 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역 어항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계류장이 독점 사용 권한 없이 운영되는 무등록상태임을 지방해양수산청이 확인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기초지방단체(지정권자)로부터 지방어항 2곳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각 사업부지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어항개발사업을 운영 중이며, 같은 법률은 어항구역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요트계류업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임에도 무등록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방어항에서 요트계류업을 하려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계속 영업을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관계기관이 '무등록 영업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어항구역의 독점적 사용 권한을 놓고 신청인 회사와 관계기관 간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관계기관이 신청인 회사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정을 고려,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면 그 결과를 후속보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건부 추후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과 △△에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 마리나 사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는 관계기관과 관련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요트 계류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자신들은 어항 구역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 요트마리나 계류업체 관계자 :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사전에 비지정권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서’]

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어항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운영해 왔던 ○○항과 △△ ◇◇항 계류장 2곳은 무등록상태임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문서를 낸 적은 없었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갱신을 안내했는데도 안 해서 따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조건부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후속보도] ○○항 마리나업체 미등록 무혐의

본문내용: 올해 초, ○○항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요트 보관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관계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요트 마리나업을 해오고 있는 ○○항입니다. 해당업체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에서 보관 계류업 등록이 의무화된 2015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자 □□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경찰에 무등록 업체로 고발했습니다.

해당업체가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항을 개발했던 기존 어촌어항법에 따라 선박 계류업을 계속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나항만 조성법에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해양경찰서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마리나항만 조성법에는 마리나업 ‘갱신 등록’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업체도 마리나허가를 취득한 뒤 일부 시설을 기부 채납하고 30년간 사용승낙을 받은 적법한 사업자라며, 당연히 계류업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아직 해당업체가 선박 보관계류업을 할 법적 근거는 마리나항만



조성법밖에 없다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담당/□□지방해양수산청 : “갱신하지 않으면 무등록으로 봐서 다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해당업체는 또, 지난 6월에 ○○항에 선박 보관 계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항구역 사용 허가도 끝난 상태여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업체측은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시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인 일부 시설 철거와 안전시설 보강을 놓고, 입장이 달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마리나 현장의 혼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방법

-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가 종결된 후 피신청인에게 위 수사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신청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속보도한다.

추후보도 사례 02 2022경기조정90/91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의 강제추행 혐의 보도와 관련, 심리 당시 무혐의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후보도 하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전지훈련에서는 미성년자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훈련장소 및 합숙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최종 종결되면 관련 내용을 추후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논의하길 원한다는 양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중재부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향후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검찰 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무혐의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후보도)으로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①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선수 영입, 사생활 침해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XX일 ○○시와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A 선수는 20XX년부터 ○○시청 실업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XX년 X월 결혼하기 전까지 ○○시청 앞 숙소에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지냈다. 결혼 후에는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A 선수와 함께 숙소생활을 하던 후배 선수들은 'A 선수와 함께 지낸 시간이 곤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 선수는 "A 선수가 숙소 바닥이나 침대에서 남자 후배 선수와 레슬링 훈련을 핑계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며 "반항하려 하면 '가만히 있어! 후 후 심호흡해'라면서 강압적으로 신체를 유린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 선수의 행동을 문제로 삼으면 불이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 후배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되레 A 선수는 '재는 우리랑 다르니까 조심해야겠다'며 후배 선수를 왕따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실제 △△일보 취재진이 A 선수와 후배 선수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A 선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선수는 "서로가 장난치면서 일어난 일로 다 같이 어울리는 상황이었고 저도 밑에 깔리기도 했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후략]**

② **[전략]** ○○시와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청 소속 수영팀은 지난 20XX년 X월 XX일부터 X월 XX일까지 □□□□고, 20XX년 XX월 XX일부터 XX월 XX일까지 ◇◇시청 등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당시 전지훈련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관련 추가 증언이 나오는 등 미투현상이 일고 있다.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수 B 씨(전 □□□□고 소속)는 "훈련 중 휴식 시간에 A 씨가 물속에서 (신체)중요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훈련기간 내내 (A 씨의)성추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지난 20XX년 당시 XX세로 미성년자였다. **[중략]**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들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선수가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A 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에 앞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성추행 추가 폭로와 관련 △△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①

보도제목: [추후보도] ○○시청 수영선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본문내용: 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 ①에서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씨는 위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②

보도제목: [추후보도] ○○시청 수영선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본문내용: 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 ②에서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과거 전지훈련 도중 당시 미성년자였던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경찰청 수사결과, A 씨는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보도 ①과 관련,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문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 피신청인은 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조정대상보도 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다. 단,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은 위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일간신문 4면 우측하단에 추후보도문 ①을, 일간신문 7면 우측하단에 추후보도문 ②를 각각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 ① 및 ②를 각각 게재하되,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동안은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추후보도문 ① 및 ②가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 ① 및 ②를 이어서 각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03 < 2022서울조정1807/1804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신청인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 보도와 관련, 무혐의 및 무죄판결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추후보도하되, 매체유형별로 피해구제보도문을 달리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전직 교도소장인 신청인이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유용을 한 의혹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킨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이 아닌 방송사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추후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사 홈페이지에 모두 추후보도를 하되, 매체별 특성에 맞춰 보도문을 따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중략]** 최근에 부장검사 출신인 교도소장, 그리고 부소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해임된 것으로 ○○○○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략]**

부장 검사를 지낸 △ 모 전 소장과 □ 모 전 부소장은 2011년부터 8년 가까이 ◇◇교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이들이 물러난 직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략]**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전 소장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략]**

② 어제 저희는 아시아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 교도소의 전 소장과 부소장 비리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지난해 4월 ◇◇ 교도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부소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검사들까지 보내 조사를 했고,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소장과 부소장이 해임됐고, 법무부는 2달 전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③ **[전략]** △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략]**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전 소장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략]**

④ **[전략]** 부장검사 출신인 △ 전 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한 종교 관련 연구소가 외국책을 번역해 냈는데, 교도소 직원에게 번역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교도소 업무 시간에 번역을 하고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전 소장이 직원 1명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①

보도제목: ◇◇교도소 △ 전 소장 ‘비리’ 무혐의·무죄 추후보도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XX년 △☆☆ 전 ◇◇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특별감찰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 전 소장은 수사가 이루어진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②

보도제목: [추후보도] ◇◇교도소 △ 전 소장 ‘비리’ 해임 관련 무혐의 및 무죄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XX년 △☆☆ 전 ◇◇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XX년 X월 X일 △ 전 소장의 업무상횡령, 교도소 직원 채용 및 전직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20XX년 XX월 X일 업무상배임, 교도소 직원 채용, 특별승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중 추후보도문 ①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추후보도문 ① 내용을 진행자의 멘트로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한다.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각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 ②를 각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방송사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04 < 2022서울조정1804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신청인의 제자 성추행 및 인건비 유용 혐의 보도와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후 항고 기각 등으로 무혐의가 확정돼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 A 교수가 제자 인건비 유용으로 인한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제자 성추행,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에 대해서도 제자 성추행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하여는 항고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각종 혐의가 항고 기각 또는 각하로 무혐의가 확정된 만큼 추후보도를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관련 수사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양측이 문안을 협의해 추후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최초 경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추후보도청구를 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언론사가 항고로 인한 수사가 계속 중임을 항변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짐. 이후 검찰의 항고 기각 및 각하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자 신청인은 다시 추후보도를 신청했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를 수용해 피해가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대학원생 제자를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 △△ A 교수'가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서는 지난 X월 말 A 교수의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XX년 X월부터 지난 X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식비 등의 공금 명목으로 돌려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자들이 인건비를 모두 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입니다.

○○대 차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A 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X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제자 성추행’ 및 ‘연구비 유용’ 의혹 ○○대 △△ 교수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 △△ 교수가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수사 결과, A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이후 항고 각하 및 기각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A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방송사닷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